8일 Market Index
코스피 7498.00 (+7.95)
코스닥 1207.72 (+8.54)
금리(국고채 3년) 3.569 (-0.023)
환율(원·달러) 1462.30 (+8.30)

metro 경제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0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6년 5월 11일 월요일

삼성 '첨단공정' 애플 '생산 다변화' 모바일 AP 경쟁
02

10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뉴시스

다주택자 양도세 82.5%… 매물잠김 우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서울전역·경기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p, 3주택 30%p 가산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세부담이 많게는 2배 이상 늘게 되면서 이전과 같이 매물 잠김 현상이 반복될지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2022년 5월 10일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지난 9일 종료됐다.

양도세 중과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 6~45%에 중과세율을 더해 과세하는 제도다.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자는 30%p를 가산한다. 지방소득세까지 감안하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의 실효세율은 최대 82.5%까지 올라간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등이다.

앞서 정부는 제도 부활 직전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완료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면제키로 하면서 토요일인 9일에도 서울 25개 구청이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양도 절차는 늦어도 11월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다주택자 적용세율

		현재		중과 유예 종료 시	
		적용세율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세율	장기보유 특별공제
일반	1주택	기본세율(6~45%)	최대 80%	기본세율(6~45%)	최대 80%
중과	2주택		최대 30%	기본세율+20%p	배제
	3주택 이상			기본세율+30%p	

자료/재정경제부

당분간 매물 잠김 현상은 나타날 전망이다. 실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 2월 이후 처음으로 7만건을 밑돌았다.

류태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과 보유세 과세 기준일 이후에는 세제 요인에 기반한 매도 유인이 급격히 둔화되면서 매물 출회 속도 역시 둔화될 것"이라며 "매물 잠김 현상과 함께 거래량 위축이 동반되는 흐름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장기적으로는 세법 개정안 등 정부 정책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과거 양도세 중과는 빈번히 매물 잠김을 초래했지만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며 "과거 데이터에 매몰되기보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은 또 "추가로 주목해야 할 핵심 변수는 전세난과 금리"라며 "전세 매물 부족에 지친 무주택자들이 매수로 선회하는 흐름은 경계해야 하며, 주택시장은 금리 등 금융 변수에 대한 민감도도 높다"고 덧붙였다.

서울 집값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승폭도 일부 확대되는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을 앞둔 5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14%) 대비 0.15% 상승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만 유일하게 하락했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상승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파업땐 국가경제 '흔들' 대만서 반사익 누리나

삼성전자 초격차의 역설

❸ 노사갈등, 경제 전반 변수로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단순 임금협상을 넘어 국가경제 전반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수출·세수·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성과급 체계 개편을 통해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전자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7%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 10% 줄면 GDP 0.78%↓
18일 파업시 영업익에 43억 영향
협력사 1754곳·지역경제 피해 우려
증권가 일각 "단기적 변수 불과"

삼성 계열사 전체 매출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20% 안팎에 달하는 규모다. 삼성전자가 국내 최대 반도체 수출 기업인 만큼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한국 수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세수 영향도 피하기 어렵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 물량이 10% 감소할 경우 GDP는 0.78%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K-칩스법) 시행 이후 3년간 받은 법인세 세액공제는 약 2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국회 및 기획재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국가적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한 기업의 생산 차질이 법인세 감소와 GDP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지난 5일 "수백억 달러의 수출과 수십조원의 세수가 감소하고 GDP가 줄어드는 등 국가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파업 손실 규모도 상당하다. JP모건은 18일간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인건비 상승과 생산 손실을 합산해 연간 영업이익에 미치는 총 영향이 최대 43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반도체 라인은 24시간 연속 가동을 전제로 설계된 초정밀 공정인 만큼 단순 생산 중단에 그치지 않는다. 이에 파업 종료 이후에도 라인 재가동과 수율 정상화에 2주 가량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글로벌 공급망 신뢰 위기도 우려된다. JP모건 분석에 따르면 파업 시 DRAM 생산량이 연간 기준 0.9%, 파운드리·시스템LSI 생산량은 2.4% 감소할 수 있다.

대만 현지 언론들은 삼성전자 생산 차질이 현실화할 경우 자국 반도체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에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E) 고객사 적격성 검증 일정이 밀릴 경우 어렵게 회복한 글로벌 리더십이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반면 증권가 일각에서는 파업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교보증권은 "노조 파업과 비메모리 부진은 단기 변수에 불과하다"며 목표주가를 오히려 상향했다.

협력업체와 지역경제 피해도 불가피하다. 삼성전자의 부품·장비 협력사는 1754곳에 달하며 평택캠퍼스 생산라인 하나당 협력사 포함 약 3만명의 일자리가 달려 있다. 이에 파업 장기화 시 파견 인력부터 감원 압박을 받을수 있고 지역 상권까지 연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2면에 계속〉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커버스토리

7000피 찍었지만 회생·파산 급증 '온도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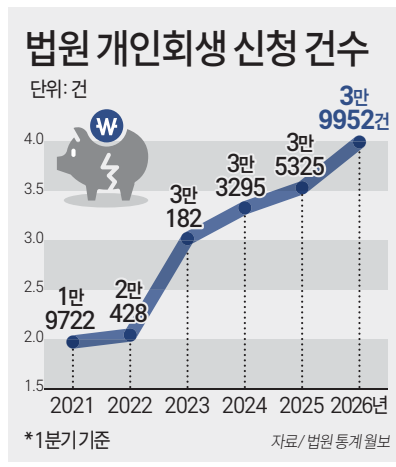
韓 경기 'K자형 양극화'

반도체·대기업 '최대 실적' 속
1분기 개인회생 전년비 16%↑
'생활비 지출' 파산도 49% 급증

코스피 지수가 70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이지만 바닥 경기는 여전히 냉랭하다. 고물가와 경기둔화, 높은 대출금리 부담이 길어지면서 빚을 감당하지 못해 법원을 찾는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최대 수준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K자형 양극화' 현상이다. 반도체와 대기업은 사상 최대 실적을 찍고 있지만 내수에 의존하는 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체감경기는 차갑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8일 코스피 지수는 종가 기준 7498포인트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지수는 지난 6일 장중 7000선을 돌파한 이후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관련기사 3면〉

인공지능(AI) 반도체 관련주 강세와 외국인의 매수세 확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등이 증시상승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사업 성장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국내 반도체를 중심으로 투자자금이 늘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금리인하 가능성이 부각되며 위험자산 투자 심리도 개선된 영향이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 안정세와 기업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외국인의 순매수 등으로 상승폭을 키웠다.



문제는 이러한 코스피 상승 랠리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는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법원 통계 월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3만 9952건으로 1년전(3만5325건)보다 16.1% 증가했다.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지난 2021년 1분기 1만9722건에서 2022년 같은기간 2만428건, 2023년 3만182건, 2024년 3만3295건으로 급격히 늘고 있다.

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개인이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울 경우 법원이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다. 고물가와 경기둔화, 높은 대출금리 부담이 장기화되면서 생활비와 원리금 상환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취약차주가 늘고 있다는 의미다.

개인 파산건수도 늘고 있다. 지난해 개인 파산 신청자 가운데 '생활비 지출 증가'를 이유로 든 비중이 48.8%로 가장 높았으며 실직 또는 소득 감소 등이 뒤를 이었다. 물가 상승과 이자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소득 기반마저 약해지자 한계에 내몰린 채무자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상용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과 개인이 연쇄 도산하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한 만큼 내수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메트로 한줄뉴스

▲나경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악탈적 세금 폭탄"
▲김태흠, '위대한 충남'…대한민국 경제 성장 중심 축으로 키울 것 /사진 뉴시스
▲조국, "평택지원특별법 개정할 것…주민이 '일석십삼조' 느끼게 해야"
▲더불어민주당, "조국, '국힘 제로' 내세우면서 민주당에 화살…분열 야기"
▲안규백 국방부 장관, 취임 후 첫 방미…"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 문제 없어"
▲"국힘, 분열하면 진다" 박형준, 부산 북구갑 보선 단일화 촉구